

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평화협력 연구부장)

이 글은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실용주의' 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다.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임으로써 외교적 시험대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로는 △과거사와 안보·경제의 분리 대응,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반일·협한 정서의 악순환 고리 단절, △대일 공공외교 강화, △다층적 복합·균형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2015.6.19) 발표자료

목 차

1. 세력전이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
 - 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
 - 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한일관계 악화
 - 다. 북중관계의 냉각과 러시아의 '귀환'
2. 신실용 외교의 확산과 '합중연형'
 - 가. '신밀월' 맞은 미일동맹
 - 나. 긴밀해진 중러관계
 - 다. AIB와 TPP를 통한 이합집산
 - 라. 신실용주의 외교의 확산
3.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
 - 가. 과거사와 안보·경제의 분리 대응
 - 나.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 다. 반일·혐한의 악순환 고리 단절
 - 라. 대일 공공외교 강화
 - 마. 다층적 복합·균형 외교 필요

1. 세력전이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

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

-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국제체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새로이 부상(大國崛起)하면서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미중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
 - 중국 외교의 DNA가 변화해, 기존의 수동적인 도광양晦(韜光養晦) 외교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입장과 이익을 표방하는 주동작위(主動作爲) 외교를 지향함. 중국은 '핵심이익(core interest)' 개념을 통해 자국의 영토·영해·주권과 관련된 사항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중인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자아정체성을 전환한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의 인정과 '핵심이익' 존중을 요구하는 '신형대국관계(新形大國關係)'를 주장함(김홍규, 2015)
-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즉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동학으로 미중 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심화될 경우, 미국의 이 지역 접근성이 크게 제약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절박감이 밑바탕이 됨
 -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핵심은 해군력과 공군력의 동아시아로의 집중적 이동임. 이러한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것임(이상현, 2014)
-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자국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보고,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에서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신안보관'을 주창하는가 하면, 대러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역균형(counter-balancing)' 정책으로 맞섬. 이에 대응해 미국은 신남방삼각(미국·일본·호주) 혹은 다이아몬드 제후체제(미국·일본·호주·인도)를 형성하려 함
 -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과 인구 구성의 이점 등에 기반해 'Pax-Americana 3.0 시대'로, 동시에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새로운 개혁 정책과 과감한 제도적 창의를 통해 '중국 부상 2.0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김홍규, 2015)
- 세력균형이론이 균형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논한다면, 세력전이론적 주장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과 국제정세의 불안

정성에 대해 경고함. 특히 세력전이론의 가장 비관적 전망 중 하나는 부상국 또는 기존 강대국이 예방전쟁의 유인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전개와 관련해 세력전이론이 가지는 함의는 실질적임. 한편 비록 지역적인 세력전이가 관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전략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초래된 상대적인 능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타국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임

-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14)의 주장처럼 평화적인 중국의 부상은 불가능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중국의 모습은 미국이 서반구의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킴. 중국은 그러한 부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물론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장악한다면, 미국은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려 할 것임. 이는 결국 양국 또는 양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견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미어샤이머의 견해임
- 미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모습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수단들을 차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적 특징을 보여줌
 -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거부적 억지와 징벌적 억지, 양 차원의 군사적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집합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하고, 군비경쟁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임. 특히 각국이 전략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군사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기의 선택적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체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추이를 변화시킬 만한 요인을 찾기는 힘들(고봉준, 2015)

*미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모습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수단들을
차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적
특징을 보여줌*

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한일관계 악화

- 미국·소련·중국에 대한 선제공습공격을 군사전략으로 제시한 1930년대 군국주의 일본의 안보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현재 일본의 안보전략 간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함
 - 아베 정부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나 방위계획대강을 팽창적인 국가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음. 유엔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의 회원국이자

요컨대,

현재의 일본은

충분한 과거사

반성 없이 종전의

‘요시다 독트린’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 제3의 길,

즉 ‘보통국가’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임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의 주시하에서 군국주의의 길로 회귀하기는 힘들. 또한, 1세기 전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강력해져 일본의 독단적인 팽창전략이 불가능함. 그러나 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자위대 군사력의 증강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일동맹 아래 경제성장에 주력해온 ‘요시다 독트린’의 국가전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

- 요컨대, 현재의 일본은 충분한 과거사 반성 없이 종전의 ‘요시다 독트린’에서 이탈하고 있지만,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 제3의 길, 즉 ‘보통국가’로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임(박영준, 2014)

○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에 기초한 ‘1965년 체제’는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필요성이 우선시된 결과,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는 문제와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됐으며, 독도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 한국에서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에 대한 불만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함. 그 배경에는 냉전 종식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 외교에 대한 국내 여론의 영향력 증대 등이 작용함. 이외에도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더욱 촉진한 요인으로는 중국의 대두를 꼽을 수 있음

- 일본은 냉전 종식 후에도 안보분야 역할 확대 노선을 채택함. 최근 아베 정권은 이를 더욱 강화해 무기수출 금지원칙 폐지, 집단적 자위권 해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노선과 역사 수정주의적 자세를 취함. 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조장했고,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2년여간 열리지 못하는 등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태임(조세영, 2015)

○ 역사상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고대 시기의 중강일약(中強日弱) 구도, 근대시기의 일강중약(日強中弱) 구도를 띠. 특히 20세기의 중일관계는 침략과 피침략, 원조와 피원조,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였음. 그러나 21세기의 중일관계는 2010년을 계기로 경제력 분야에서 중강일강(中強日強)의 ‘대칭형’ 구도로 바뀌고, 지금은 양국이 동북아 주도권을 놓고 경쟁함

-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같은 시기 중국의 제18대 공산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 또한 첫마디에 ‘중국의 꿈(中國夢)=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함. 오늘날 중일관계는 아베와 시진핑이 제시한 ‘강한 일본’과 ‘중국 부흥’이 강한 마찰음을 내면서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베노믹스로 지지율을 올린 아베 정권은 침략전쟁 부인, 고노 담화 검증, 무라야마 담화 재검토, 야스쿠니신사 참배 강행 등 역사인식을 후퇴시키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을 감행함. 아베 총리는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와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헌법개정(9조)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구축함
-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의 축복 속에 ‘보통국가’로 재탄생하기 위한 일본의 겸허한 자세가 아쉬움. 2015년 4월 6~7일에는 일본에서 중학교 교과서 검증 결과와 ‘2015년 외교청서’가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아베 정부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학생들과 국민을 가르치려 함. 역대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가 불거지면 ‘무라야마 담화’를 내세워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했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함. 아베 정부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음. 아베 정부가 미래를 중시한다면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것이 미래의 한·중·일 3국 관계에 큰 악재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차재복, 2015)
- 이처럼 한일관계는 여전히 ‘과거사 갈등’이라는 거대한 벽에 직면함. 특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이 사실상 전제조건화 되어 있고, 정부가 이를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에 따라 2015년 8월,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아베 총리가 분명한 역사인식을 표명할지 여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다. 북중관계의 냉각과 러시아의 ‘귀환’

- 중국은 종전의 북중 특수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후진타오 시기에 설정했던 북한과의 정상적인 국가관계 추진 방향을 시진핑 시기 들어 확고히 함
- 대북문제 주도권이 중국 중앙대외연락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가고 있음. 중국은 북한과의 대규모 국가단위 경제협력을 자제하고 대북 에너지 공급 압박과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강화함. 중국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김정은 정권에 교훈을 주겠다는 의지로 보임. 핵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등 한반도 비핵화 의지도 전혀 없이 강함. 최근 북한의 대중 비난 강화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음을 함축함
- 반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익과 관련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높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통일시 반중 정권의 수립 가능성 등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게

**중국은 종전의 북중
특수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후진타오 시기에
설정했던 북한과의
정상적인 국가관계
추진 방향을
시진핑 시기 들어
확고히 함**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극동·시베리아의 개발과 아태 경제권으로의 진입 등을 도모하는 신 '동방정책'을 더욱 강화함

하는 요인임. 북한도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탈피하려 시도 중임(김홍규, 2015)

- 러시아의 푸틴 3기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극동·시베리아의 개발과 아태 경제권으로의 진입 등을 도모하는 신 '동방정책'을 더욱 강화함.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대미 공조전선을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함. 이러한 러시아의 '아시아 귀환'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독립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점 등 적잖은 제약 요인이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서구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동아시아 진출에 주력하고 있음(엄구호, 2014)
- 러시아는 대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입지 회복도 모색하고 있음. 러시아는 북한의 채무 약 109억 달러 중, 90%를 탕감해주고 무역대금의 루블화 결제에 합의함. 양국은 2015년 4월 제7차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자원개발·인프라·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담은 의정서에 서명함.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의 내륙철도 현대화사업, 전력망 연결사업, 천연가스 파이프연결사업 등 나진-하산 철도 연결사업을 모델로 한국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연합뉴스, 2015년 5월 14일)

2. 신실용 외교의 확산과 '합종연횡'

가. '신밀월' 맞은 미일동맹

- 아베 총리는 2015년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을 한층 격상함으로써 대중 견제를 위한 '미일 신밀월시대'를 열.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한 아베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대응 범위를 현재의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함
- 미일 '신밀월'의 핵심은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임.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이라는 '안보동맹'과 TPP라는 '경제동맹'의 두 날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임. 미국은 TPP를 조기 타결하고 일본의 역할 확대로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에 필요한 군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아베 총리의 구상은 미일동맹 강화로 인한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임
-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당초 일본이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것에서 출발해 1997년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후방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 이번 개정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미국이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음. 둘째, 일본의 지원 범위가 동북아가 아닌 전 세계로 확대됨. 셋째,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공동 방어를 위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 것임

- 이로써 세계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중국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이번 개정에 한국은 득실이 엇갈림. 긍정적 측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외에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게 돼 전쟁 억지 효과가 커진 점임. 하지만 다자가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이 때문에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는 긴밀한 협조와 투명성이 요구됨.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은 미·일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 있음(진창수, 2015)

나. 긴밀해진 중러관계

-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미일동맹에 맞서 군사와 경제 등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는 신실용 외교 행보에 나섬
 - 2015년 5월 9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항의해 대거 불참한 데 반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군사 퍼레이드에 의장대까지 파견함. 이날 기념식 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단극세계를 건설하려는 시도와 군사적 동맹 결성의 사고가 세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함(동아일보, 2015년 5월 11일). 이는 중국과 힘을 합쳐 미일동맹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로 분석됨
- 중러 양국은 최근 들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 양국은 2015년 5월 흑해와 지중해에서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함. 이는 미일동맹의 작전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임
 -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최신예 수호이-35 전투기 35대, 6기의 S-400 최첨단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계약을 체결함. 미·일의 새 방위협력지침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동부해안에 배치할 계획으로, 사거리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미일동맹에 맞서
군사와 경제 등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는 신실용
외교 행보에 나섬*

중국이 개도국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AIIB의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 내 정치경제
상황의 대외적
투사이자
미국의 아태지역
경제패권에 도전하는
대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임

400km인 S-400은 센카쿠 분쟁에서 미일동맹을 견제할 수 있음. 러시아가 S-400을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 처음임(조선일보, 2015년 5월 4일)

- 2015년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집중 논의함. 중국이 러시아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6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양국은 32건의 계약서에 서명함. 러시아는 중국과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양해각서도 체결함(조선일보, 2015년 5월 9일)
- 러시아는 10년간 끌어온 중국과의 가스 협상을 마무리해 유럽에서의 가스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에 대비함. 러시아 가스프롬은 2018년부터 연간 380억㎥의 4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30년간 중국에 공급하기로 함. 이는 중국 소비량의 23%, 가스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함(엄구호, 2014)

다. AIIB와 TPP를 통한 이합집산

- 중국이 개도국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 내 정치경제 상황의 대외적 투사이자 미국의 아태지역 경제패권에 도전하는 대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임
- 2015년 전반기에 가입국 접수를 시작한 AIIB의 자본금은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함. 기존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자본금 1,628억 달러, 세계은행의 2,232억 달러와 비교하면 특이사항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립 회원국 수가 57개국에 달한 것은 AIIB의 국제적 매력도를 보여줌. AIIB 설립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보임.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이 맨 처음 가입을 선언하고 일본을 제외한 서방의 주요국 대부분이 가입함으로써 AIIB가 아시아를 넘는 세계적 경제기구라는 인식이 확산됨.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 10개국도 AIIB에 합류함. 한국도 AIIB의 창립 회원국이 됨. 미일 주도의 ADB와 세계은행이 총 대출의 10% 정도를 인프라 건설에 배정하는데 반해, AIIB는 인프라 투자에만 전념하게 됨(김기수, 2015)
-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 주도의 AIIB를 견제하면서 아태지역의 경제·무역 질서를 주도해 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한국도 TPP 가입을 고려 중임
-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미국의 전통 우방과 함께 한국까지 AIIB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1라운드 대전에서 ‘뼈아픈 일격’을 당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조속히 타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 AIIB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 주도권을 중국에 내줄 수도 있기 때문임.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TPP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 나가야 한다”며 대놓고 중국 견제용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음 (연합뉴스, 2015년 5월 7일).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놓고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는 양상임

라. 신실용주의 외교의 확산

- 근래 들어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외교가 확산되고 있음.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 됨
 - 냉전 체제가 끝난 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대가 기울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구도를 형성함. 특히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여 외교적 시협대에 섬.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언론은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함.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임
- 달라진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각국의 ‘신실용주의’ 외교는 이미 현실화함.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대표적임. 한국·일본과 함께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호주와, 중국 견제를 위해 20년 만에 다시 미군 주둔을 허용한 필리핀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한 것이 실례임
 - 달라진 국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전통 강국들도 마찬가지임. 영국은 러시아 제재에서는 미국과 굳건하게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중국의 AIIB에는 가장 먼저 가입해 독자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함.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의식해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면서도 AIIB나 BRICS가 창설하는 신개발은행(NDB)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의 금융 패권에 맞섬
 - 미중도 예외가 아님. 미중은 ‘아시아 재균형’과 ‘접근 억제 전략’으로 충돌하면서도 전략경제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역사·

근래 들어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新)실용주의(neopragmatism)’ 외교가 확산되고 있음.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 됨

미중은

**‘아시아 재균형’과
‘접근 억제 전략’으로**

충돌하면서도

전략경제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역사·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해빙을

모색하고 있음

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해빙을 모색하고 있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홍규 교수는 “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미중 사이에서 사안별로 고민하는 국가들과 ‘중견국 협력체’를 구축해 지혜를 모으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제안함(동아일보, 2015년 5월 5일)

3.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

가. 과거사와 안보·경제의 분리 대응

- 2015년 5월 25일 일본 역사학연구회를 포함해 일본 내 역사·교육 관련 16개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성명을 냄. 이번 성명은 지난 5월 6일 세계의 저명한 역사학자 187명이 “역사학자들은 일본군이 여성들의 이송이나 위안소 관리에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를 발굴해 왔다”며 집단 성명을 내고 이후 다수 학자(456명)가 동참한 데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가해 당사국인 일본에서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일본 여론이나 일본 정부의 태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그동안 아베 총리는 역사 왜곡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옴(연합뉴스, 2015년 5월 25일; 조선일보, 2015년 5월 26일)
- 동아일보가 2015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70.1%)이 반대 의견(22.4%)의 3배를 넘음.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41.0%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27.3%)’나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11.1%)’라는 응답을 크게 앞지른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옴(동아일보, 2015년 4월 2일)
-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표면상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도 한국이 불응해 온 모양새를 감안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개최한 뒤에 명분과 실리를 다진 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게 바람직함. 다만 한일 정상회담도 한일 수교 50주년인 금년 내에 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현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해 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큰 관계 악화만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임
 -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5월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현안은 그대로 계속 해결을 추구하고 이와 별도로 경제문제나 안보협력 등은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힘(연합뉴스, 2015년 5월 4일)
-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안보·경제·관광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과거사를 안보·경제·문화 등 분야와 분리하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 유지 속에 양국 간에 상호 호혜적 분야의 교류가 부쩍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임
-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15년 5월 30일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년여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림. 한일 재무장관 회의도 2015년 5월 23일 도쿄에서 2년 6개월 만에 열렸는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회담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한일 통상장관 회담도 2015년 5월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2년 1개월 만에 열림. 이에 앞서 2015년 4월 11일에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 계기에 한일 관광장관 회담도 개최됨. 요컨대, 한일 간에는 이미 ‘정상회담 없는 관계 정상화’에 들어선 양상임
-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흐름이 과거사 문제 진전과, 궁극적으로 정상회담 등 한일 간 진정한 관계 개선으로 선순환할 수 있을지 주목됨.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는 양측의 필요성에 따른 측면이 큼.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이 SLBM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도 세계경제의 침체·둔화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임
- 정부는 한일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에 앞서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현 상황에서 서울이나 도쿄에서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하반기 APEC 정상회담이나 ‘ASEAN+3’ 회의 중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함(연합뉴스, 2015년 5월 24일)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안보·경제·관광 등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과거사를 안보·경제·
문화 등 분야와
분리하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기조
유지 속에 양국 간에
상호 호혜적 분야의
교류가 부쩍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임**

특히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5월 20일,****제주평화연구원의****주관으로****제주도에서 열린****제10회 제주포럼에서****“올해 한·중·일****3국 정상회의가****2010년처럼****평화와 화해를****상징하는 섬****제주도에서 가장****빠른 편리한 시기에****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힘****나.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 실타래처럼 얽힌 한·중·일 간의 갈등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중단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재개하는 게 중요함.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을 윤번제로 오가며 개최되고 있는데,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함. 따라서 한국 정부는 난국 타개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 노력해야 함. 한국으로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거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게 자연스런 수순임
-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2013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고, 2014년에도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음. 이처럼 3국 간 최고위 회의체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됨에 따라 58개의 3국 정부 간 협의체 전체가 그 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음. 물론 3국 간 갈등의 복잡한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야말로 갈등 완화 내지 해소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방안임
- 2014년 11월의 베이징 APEC 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동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에 대한 장애는 크게 완화되고 분위기도 성숙되고 있음
 - 한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만날 수도 있음. 한·중·일은 2015년 3월,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5년 5월 20일, 제주평화연구원의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제10회 제주포럼에서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2010년처럼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섬 제주도에서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다. 반일·협한의 악순환 고리 단절

- 최근 일본의 보수적 미디어와 우익계 잡지는 긴밀한 한중관계를 놓고 한국을 ‘리틀 차이나(little China)’로 부르는 등 협한을 부추기는 논조를 보임. 또 일본 내에서 ‘한국을 때리는’ 상업적 출간물들이 줄을 잇고 있음
 -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토대 교수는 협한파의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수교 이후 50년간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어 왔는데, 일본인 시각에서 보면 ‘일본과 더 이상 사귀지 말자’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을 배척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중국 쏠림 현상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력 많은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과 우호적으로 지내온 오랜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 쪽으로만 가버리느냐는 서운한 마음이 일본인들에게 생기는 게 사실이다. 그것이 혐한 감정을 더 부추긴다. 자신을 혐한파라 부르지 않는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혐한파로 분류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꽤 많아졌다”고 분석함

- 오구라 기조 교수는 한국이 어떻게 일본에 접근하고 또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 “물론 일본이 변해야 하지만 한국도 1965년 한일수교 이후 양국이 함께 축적해왔던 화합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본 측의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일본사회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진단함. 그는 또 “한국인들이 일본을 비판만 한다는 인식을 주면 혐한파와 아베 정권에 성장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지금의 한일사회를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 혐한파를 친한파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함(조선일보, 2014년 11월 25일)

- 반일·혐한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한국은 정치인들부터 ‘반일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며, 우리 정부와 지식인 사회도 동북아의 공동운명체적 평화공존과 지역협력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반일감정을 승화시키기 위한 여론 순화 캠페인에 적극 나서야 함

라. 대일 공공외교 강화

-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권에 불만이 있더라도 일본의 학계 등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 한국 정부가 ‘보통의 일본 국민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는다’는 메시지를 부단히 내보내는 게 바람직함. 양국 청소년 등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이벤트를 갖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함
- 2010년 한일합병 100주년에 KBS와 NHK가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62.2%, ‘싫어한다’는 24.8%였음(KBS 방송문화연구소, 2010). ‘한국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1999년 설문조사시 43%였던 데에 비해 대폭 증가한 배경에는 한류 붐이 있었음.

“한국인들이 일본을 비판만 한다는 인식을 주면 혐한파와 아베 정권에 성장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의 한일사회를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 혐한파를 친한파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

**한일 간의 민감한
갈등 사안에 대한
양국 언론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언론인들이
갈등 현안 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함은 물론,
양국 언론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상대국 입장의
숙지가 필수적임**

일본인에게 ‘한국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물은 결과, 배용준이 20.8%로 1위였음.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 이후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감하고(2014년 40%), 일본에서의 한류 붐도 급냉각되어 한류의 중심지인 도쿄 신오쿠보 거리는 반한시위로 몸살을 앓음.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교착된 양국관계의 ‘출구’ 마련을 위해, 일본 대중문화의 미개방 분야에 대한 완전개방 선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조선일보, 2012년 10월 9일)

- 한일 간의 민감한 갈등 사안에 대한 양국 언론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언론인들이 갈등 현안 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함은 물론, 양국 언론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한 상대국 입장의 숙지가 필수적임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966년 이래 매년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를 양국에서 번갈아 열고 있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일 중견 언론인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일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를 2011년 이래 매해 열고 있지만 양국 간 갈등 현안을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일선 기자들의 교류는 찾아보기 힘들. 미디어 공공외교 강화 차원에서 한일 언론인들 간의 격의 없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위한 회합을 다양한 레벨에서 빈번하게 마련하는 게 절실함

마. 다층적 복합·균형 외교 필요

- 한일관계 파행은 양국 간 외교 마찰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파급돼 투자와 교류를 위축시켰고, 양국 국민 간 상호인식이 악화됨으로써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비용이 크게 증대됨. 비단 양국관계에 한하지 않고 동북아 지역협력과 다자외교에도 악영향을 초래해 한국의 외교의 전반적인 전략 공간을 제약함. 특히 동북아 국제질서가 미중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세력에 의한 지역질서 안정화 기제의 구축도 저해함
 - 한일관계 악화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현 정부의 통일(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역(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또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음.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게 미중의 움직임이 상호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불가결함(조양현, 2015)

- 지정학적 요충인 한반도에 자리잡은 한국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한·중·일, 한·미·중, 남·북·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층적 복합·균형외교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한국은 특유의 ‘포지셔닝 파워(positioning power)’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세력균형에 기여하고 다자협력의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충실히 해내야 함. 대일외교도 이러한 큰 구도의 인식에 기초해야 함
- 미일 ‘신밀월’에 대응해 중러 또한 밀월관계로 발전하면서 오는 9월 중국의 항일전쟁 70주년을 앞두고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갖기로 함. 이 역시 미일의 새 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키운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일 대 중러의 ‘신냉전’ 움직임마저 엿보임. 따라서 한국 외교는 독자적 운신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는 가운데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요청됨
- 극심한 역사 및 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2014년 11월 “최근 긴장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의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실용외교’를 선보인 것은 주목할 만함

한국은 특유의 ‘포지셔닝 파워(positioning power)’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세력균형에 기여하고 다자협력의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충실히 해내야 함. 대일외교도 이러한 큰 구도의 인식에 기초해야 함

참고문헌

고봉준(2015).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JPI정책포럼』 No.2015-05. 제주평화연구원.

김기수(2015).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미국의 세계경제패권에 대한 도전일까?” 『정세와 정책』 2015년 5월호, 세종연구소.

김흥규(2015).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 관계.” 『JPI정책포럼』 No.2015-01/03/04. 제주평화연구원.

박영준(2014).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동아시아 질서.” 『외교』 제110호 (2014.07). 한국외교협회.

엄구호(2014). “푸틴 3기 러시아 정부의 아·태지역 안보전략.” 『외교』 제110호 (2014.07). 한국외교협회.

이상현(2014). “아·태지역 정세와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외교』 제110호 (2014.07). 한국외교협회.

조세영(2015).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 『JPI정책포럼』 No.2015-01/03/04. 제주평화연구원.

조양현(2015).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대일외교 과제 및 전략.” 『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5-0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진창수(2015). “미·일 신밀월시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전문가 진단], 중앙선데이, 2015/5/3.

차재복(2015). “동북아 역내 협력의 과제: 중-일 관계 개선과 한·중·일 3국 협력 체제 복원.” 제10회 제주포럼 발제문.

KBS 방송문화연구소(2010). 『KBS-NHK 한일 공동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동아일보, 2015년 5월 11일; 2015년 5월 5일; 2015년 4월 2일.

연합뉴스, 2015년 5월 25일; 2015년 5월 24일; 2015년 5월 14일; 2015년 5월 7일; 2015년 5월 4일.

조선일보, 2015년 5월 26일; 2015년 5월 9일; 2015년 5월 4일; 2014년 11월 25일; 2012년 10월 9일.

❖ 저자 약력

■ 진행남

現 제주평화연구원 평화협력 연구부장. 경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음.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공공외교, 남북관계, 동아시아 다자협력(제주프로세스), 한류와 문화공동체 등임. 최근 연구로 “한·중·일의 민족주의 특성과 갈등 완화 방안”,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방송매체의 영향”,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 방안”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평화협력 연구부장)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